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방향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for Serious Civil Accidents

김정곤* · 박미숙** · 김도형*** · 이재후**** · 김태환*****

Kim, Jung Gon · Park, Mi Sook · Kim, Do Hyung · Lee, Jae Hoo · Kim, Tae Hwan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실무적으로 정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652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관련 실무상의 애로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애로사항의 상당부분은 관련 기준이 부재하여 발생하고 있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방향도 높은 비율로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기준제시를 위하여 시행령 개정과 함께 관계부처가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개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 serious civil accident,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1. 서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무적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법률 도입의 목적인 중대재해 예방 및 감소 효과도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공무원 및 산하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상의 애로사항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향 의견을 조사하고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방향에 대하여 고찰한다.

2. 본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실무적용상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는 2022년 7월 12일 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전국지자체 공무원 및 산하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에 참여한 65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항목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과 관계기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가이드 및 매뉴얼을 분석하여 선정하였다. 조사에 적용한 중대시민재해 업무항목으로는 안전계획 수립, 안전관련 인력 편성 및 확보, 안전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설별 점검계획 및 안전 점검,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계획 마련, 비상조치 계획 마련,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위험요인 점검,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절차 마련,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재해발생시 재발 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도급용역위탁기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급, 안전계획 이행현황 점검 및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사항 확인 및 이행, 법정 의무교육 이수, 의무 이행현황 및 교육 이수여부 점검 및 조치를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은 1인당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 현재 편성 및 운용 기준이 부재한 인력과 예산관련 업무, 안전계획의 수립업무, 도급용역위탁에 대한 안전관리 능력평가 기준마련과 개선업무, 유해위험요인 점검과 개선업무,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업무 등이 주요한 업무상의 애로사항으로 파악되었다(그림 1)

* 정회원 ·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연구소장, 방재관리연구센터 연구실장 garoo72@dmrc.kr

** 정회원 ·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zinblue1@naver.com

*** 정회원 ·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dnsura@naver.com

**** 정회원 ·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benza88@naver.com

***** 정회원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twehwan@emp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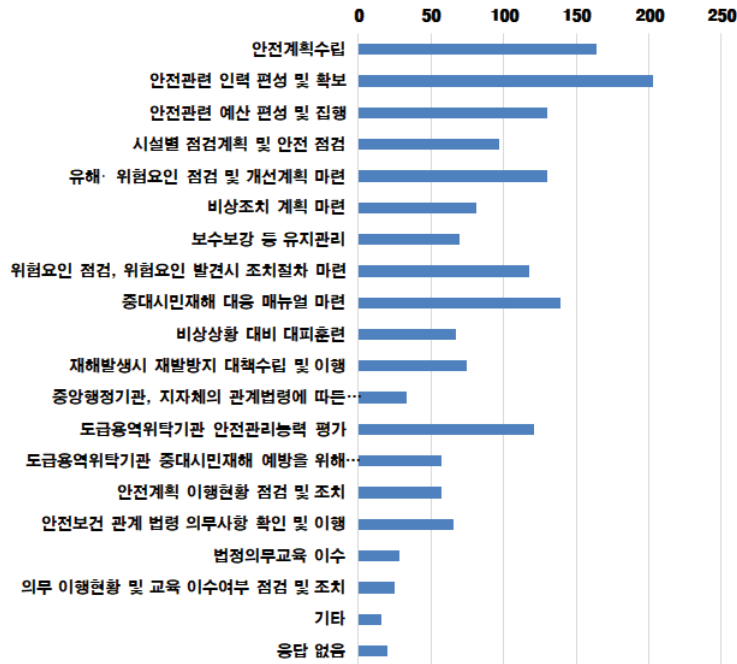


그림 1.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 수행상의 애로사항

한편 동일한 응답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의견에 있어서는 개정필요 의견이 65.5%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행 유지가 32.1% 그리고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의견은 1.1% 이었다. 또한 개정의 방향 및 범위에 있어서는 소폭완화가 35.1%로 가장 많았으며, 대폭완화가 8.9%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완화 의견이 전체적으로 44.0%이었다. 반면, 소폭강화가 18.7%였고 대폭강화가 7.1%로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의견이 전체적으로 25.8%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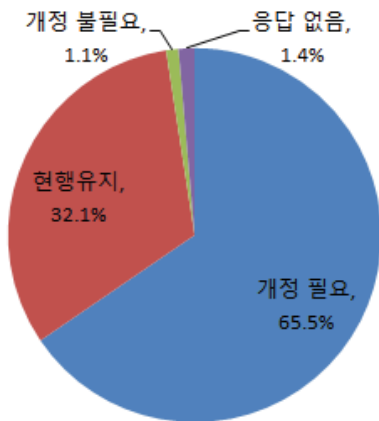


그림 2.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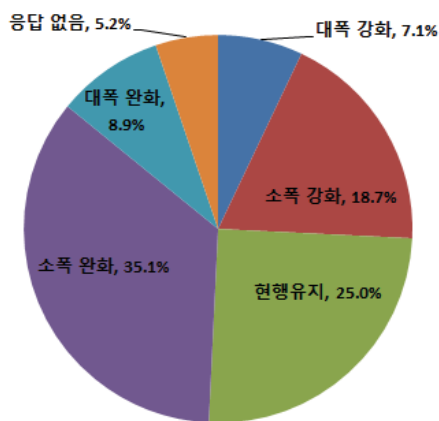


그림 3.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도에 대한 의견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는 의무사항 실행을 위한 구체적 기준제시가 가장 많은 요구사항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현재 법령 및 시행령 그리고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발간한 가이드와 매뉴얼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체성의 문제는 중대산업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기반하고 있어서 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할 수 있는 반면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특정한 법률이 아닌 다양한 관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시설별로 적용되는 관계법령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명확한 처벌기준에 대한 제시가 두 번째로 많았는데 이는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대상과 설계, 제작, 설치 그리고 관리상의 결함과 재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판례가 충분히 마련되지 전까지는 논란의 소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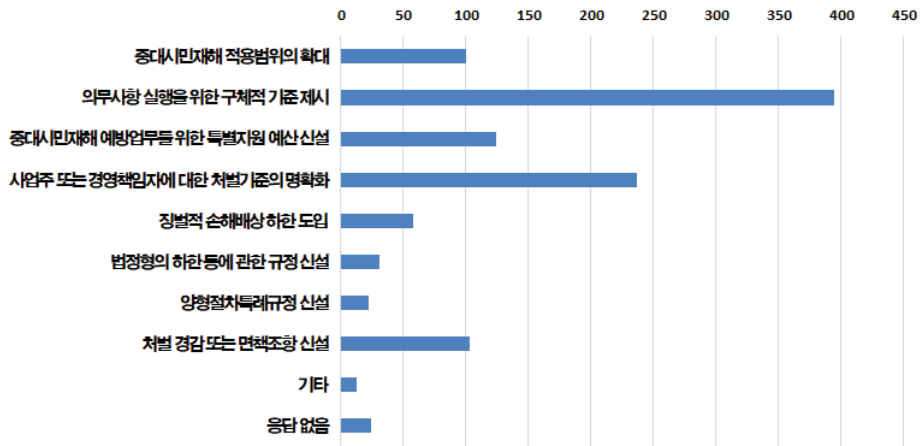


그림 4.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선적 개선 요구사항

3. 결론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법률 자체의 부실함과 준비부족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실무에 정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실무상의 애로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 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공공기관 652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무자들은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애로사항의 상당부분은 기준이 부재하거나 기준제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높게 나타났다. 그 영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비율로 의무사항들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은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사안이며, 우선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미비한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한정된 사항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충분히 실무적으로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에서 발간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개정 및 보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참고 가능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서울시(20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중대시민재해 대비안내서
 고용노동부(202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
 국토교통부(202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
 환경부(202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원료·제조물)
 소방청(202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김정곤, 김도형, 채종길(2021)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위에 대한 고찰: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2021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pp.187-190